

행정학

해설위원 : 윤 세 훈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월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초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국가직 7급 행정학은 처음 보는 생소한 이론이나 주제가 출제되어 체감 난이도가 매우 높았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7번 잉그람과 슈나이더(Ingram & Schneider)가 제시한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모형', 9번 정책학습 모형, 10번 예산이론이 생소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높였다.

또한 3번 dBrain System, 4번 SWOT분석, 15번 국고보조금, 17번 소청심사제도, 20번 정보통신기술 활용 개선사례 역시 수험생들이 정답을 판단하는데 있어 고민을 많이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4번 SWOT, 15번 국고보조금, 17번 소청심사제도는 출제예상 A급에 해당되었지만, 보기 지문들이 기존 기출문제에서는 볼 수 없던 내용과 기본서에서 역시 강조되지 않던 내용들로 구성되어 수험생들의 판단을 어렵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번 예산이론, 15번 국고보조금은 생소한 보기 지문들로 구성되었지만, 이미 기출에서 많이 다룬 보기 지문이 정답으로 출제되어 기출문제만 제대로 풀었다면 지문 중 하나만 알고 답은 정확히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4번 SWOT, 7번 잉그람과 슈나이더(Ingram & Schneider)가 제시한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모형', 9번 정책학습 모형은 본 강사가 항상 강조하는 **감각적 풀이비법**으로 접근한다면 막상 찍었는데 정답은 맞는 경험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제 해설에서 key로 설명해 둔 부분을 관심을 갖고 살펴보길 권한다.

그리고 국가직 7급 행정학의 난이도를 높였던 이유 중 하나는 '~옳지 않은 것은?'을 묻는 지문 보다, '~옳은 것은?'을 묻는 지문이 많이 출제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옳은 것은?'에 대한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기지문 하나하나를 보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소했던 보기 지문들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든지, 기본서로 공부한 수험생이든지 모두 생소할 수 밖에 없는 과목이 행정학이다. 하지만 매년 기출문제나 기본서에서 다루지 못하는 생소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그동안 강조되지 않던 내용까지 모두 암기하기에는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너무 방대하다. 이에 수업시간에 항상 강조하였듯이 생소한 문제에 대한 접근은 '오답화 주요패턴을 통한 감각적 풀이'가 요구된다. 월비스 고시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윤세훈 교수의 무료특강(오답화 주요패턴을 통한 감각적 풀이비법)**을 찾아 꼭 수업을 들어보길 권한다. 생소한 문제는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워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선을 다해 기출문제 중심으로 최대한 암기해 나간다면, 국가직 7급 시험에서와 같이 난이도가 높은 행정학이 오히려 합격의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총 론	2	정책론	4
조직론	4	인사행정론	4
재무행정론	4	환류론·정보화	1
지방자치론	1		

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 ③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된다.
- ④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정답] ②

[해설]

- ② ×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 ④ ○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받아야 하지만, 신규 지정된 해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02.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유형에 따라 집행과정의 특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정책유형은?

- 집행과정의 안정성과 정형화의 정도가 높다.
- 집행에 대한 갈등의 정도가 낮다.
- 집행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의 정도가 낮다.
-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
-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압력의 정도가 낮다.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정답] ①

[해설]

- ① ○ :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에 따르면, 분배정책 > 경쟁적 규제정책 > 보호적 규제정책 > 재분배정책 순서대로 분배정책 쪽에 가까울수록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고, 안정성이 높고, 갈등은 낮다. 즉 분배정책에서 집행과정의 안정성과 정형화의 정도가 높고,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 또한 집행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의 정도가 낮아 집행에 대한 갈등의 정도가 낮다.

03. dBrain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무현 정부 당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구축이 추진되었다.
- ② 예산편성, 집행, 결산, 사업관리 등 재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연계 처리하도록 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 ③ dBrain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 ④ UN 공공행정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정답] ③

[해설]

- ③ × : dBrain System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의미한다. dBrain 구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도입은 가능하다.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므로 예산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dBrain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의 도입이 가능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dBrain은 발생주의·복식부기는 물론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성과관리제도, 프로그램예산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반으로 기능한다.

04. SWOT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 내적 특성과 외부 환경의 조합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다.
- ② 조직 외부 환경은 기회와 위협으로, 조직 내부 자원역량은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한다.
- ③ 다양화 전략은 조직의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기존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폐지는 약점-기회를 고려한 방어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④ × : 기존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폐지는 약점 - 기회를 고려한 **방향전환전략**(WO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방어적 전략(WT 전략)은 약점-위협을 고려한 전략이다.
- KEY** 보기 ③, ④가 오답화 가능성이 있음을 느끼는가? 보기 ③은 다양화 전략강점-위협 고려하는 전략이다. 보기 ④는 방어적 전략은 약점-기회 고려하는 전략 + 기존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폐지라고 서술되어 있다. 만약 찍는다면 몇 번을 찍겠는가?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 (Opportunity)	SO전략(공격적 전략) :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WO전략(방향전환 전략) :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는 전략
위협 (Threat)	ST전략(다양화 전략) :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WT전략(방어적 전략) :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05. 미국 민주주의의 규범적 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제퍼슨주의(Jeffersonianism)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 책임을 강조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와 본권적 참여과정을 중시한다.
- ② 잭슨주의(Jacksonianism)는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강조한다.
- ③ 매디슨주의(Madisonianism)는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해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을 지향한다.
- ④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는 다원적 과정을 통한 이익집단 요구의 조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 : 제퍼슨주의는 최소한의 행정으로 분권과 자유를 옹호하는 모형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의한 민주적 행정이 최선이라는 지방분권주의를 제창하였다.
- ② × : 잭슨주의는 연관주의를 통한 행정의 정치화와 관련된다.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강조하는 것은 우드로윌슨(W. Wilson)과 관련된다.
- ③ × : 해밀턴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④ × : 매디슨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06.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new performance budgeting; result-oriented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세기 후반부터 주요 국가들이 재정사업의 운영과정이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 ② 재정사업의 목표, 결과, 재원을 연계하여 예산을 '성과에 대한 계약'의 개념으로 활용한다.
- ③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조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 ④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도입했다.

[정답] ④

[해설]

- ④ × :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를 도입했다. PART는 부시 행정부에서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GPRA를 보완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도입되었다.

07. 잉그람과 슈나이더(Ingram & Schneider)가 제시한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적 형상(Social Image) 정치적 권력(Political Power)	긍정적	부정적
	수혜집단 (Advantaged)	주장집단 (Contenders)
높음		
낮음	의존집단 (Dependents)	이탈집단 (Deviants)

※ 사회적 형상: 정책결정자 및 국민들이 정책대상집단에 대해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

※ 정치적 권력: 다른 집단과의 연합형성의 용이성, 동원가능한 보유자원의 양, 집단구성원들의 전문성 정도

- ① 사회문제를 설명할 때 이미지, 고정관념, 사람·사건에 대한 가치부여 등에 관한 해석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한다.
- ② 특정 정책대상집단이 둘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사회적 구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 ③ 정책설계 및 집행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객관적 분석으로 단순화하는 방법론을 지향한다.
- ④ 정책설계는 기술적인(technical) 과정이므로 어느 집단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 ② ○ : 정책이해당사자들은 정책문제에 관한 상황과 조건을 토대로 이를 해석하여 정책문제를 인지·정의하는데 이를 '사회적 구성'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인식도 정책문제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Ingram & Schneider에 따르면 군인, 아동, 어머니, 중소기업가, 주택소유자는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범죄자, 테러리스트, 게이와 레즈비언, 대기업, CEOs, 노동조합, 오염산업, 극우파, 환경론자 등은 부정적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이에 특정 정책대상집단이 둘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사회적 구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본다.
- ① × : 사회적 구성은 정책문제를 주관적 해석을 통해 인지하는 과정으로, 사회문제를 설명할 때 이미지, 고정관념, 사람·사건에 대한 가치부여 등에 관한 해석이 포함된다.
- ③ × : 정책설계 및 집행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객관적 분석으로 단순화하는 방법론을 지양하고 주관적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④ × : 정책설계는 기술적인(technical) 과정보다는 정치적(political) 과정이므로 어느 집단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잘 발생하게 된다.
- KEY** 처음보는 생소한 문제라 틀려야 하는가? 보기①의 가치부여 등에 관한 해석 배제, 보기 ③의 객관적 분석으로 단순화 지향, 보기 ④의 기술적인(Technical) 과정 모두 정책 설계를 객관적이고 기술적이며 가치판단이 배제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은가? 보기④만 관계만 잘 보아도 생소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08.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아닌 것은?

-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② 「정부기업예산법」
- ③ 「군인연금특별회계법」
- ④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정답] ③

[해설]

- ③ × :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등은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운영된다.
- ①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근거법률이다.
- ② ○ : 「정부기업예산법」은 우편사업·우체국예금·양곡관리·조달특별회계의 근거법률이다.
- ④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근거법률이다.

09. 정책학습(policy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학습의 주체는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일 수도 있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개인, 조직 또는 정책창도연합체(advocacy coalition)일 수도 있다.
- ② 로즈(Rose)의 '교훈연구(도출) 학습'은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조사연구하여 창도자의 관할지역에 도입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 ③ 하울렛과 라메쉬(Howlett & Ramesh)의 '내생적 학습'은 정책문제에 정의 또는 정책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를 포함한다.
- ④ 버크랜드(Birkland)가 제안한 '사회적 학습'은 하울렛과 라메쉬의 '외생적 학습'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 ③ × : 하울렛과 라메쉬(Howlett & Ramesh)의 '외생적 학습'은 정책문제의 정의 또는 정책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를 포함한다. 하울렛과 라메쉬(Howlett & Ramesh)는 정책학습이 특징인 정책하위체계 내부 정책결정자 수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일반 대중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내생적 학습과 외생적 학습을 구분하였다. 내생적 학습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특정 정책하위체계 또는 정책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진다. 즉 정책하위체계 내의 정책결정자들이 과거에 취했던 행동에 비추어 그들의 정책을 세련화하고 적응시키려고 하는 시도으로써 정책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습의 대상은 정책의 환경들(policy setting) 또는 정책의 수단들이다. 한편 외생적 학습은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며, 문제에 대한 해석 또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된 정책의 목적들에 대한 의문을 포함한다.

	내생적 학습	외생적 학습
학습의 주체	소규모적이며, 기술적으로 전문화된 정책 네트워크	대규모적이며, 누구나 참여하는 정책커뮤니티
학습의 대상	정책의 환경(setting) 또는 정책의 수단들	문제에 대한 인지(perception) 또는 정책목적, 그리고 아이디어

- ④ ○ : 사회적 학습은 정책과정 외부에서 시작되며, 정책결정자가 사회를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 버크랜드(Birkland)가 제안한 '사회적 학습'은 하울렛과 라메쉬의 '외생적 학습'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 학습은 목적들 그 자체에 대한 학습이므로 가장 근본적인 유형의 학습이다. 이 학습은 정책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사고방식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시장원리에 의한 민영화정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가 실업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한 것이 사회적 학습의 좋은 예이다.

KEY

- 보기 ③, ④가 문제의 주인공임을 느끼는가? 하울렛과 라메쉬(Howlett & Ramesh)의 '외생적 학습'과 '내생적 학습'이 이 문제의 주인공이다. 보기 2개나 하울렛과 라메쉬(Howlett & Ramesh)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 않은가? 분명 외생적 학습이라고 쓴 부분이 내생적 학습이라고 바뀌어 있든지, 내생적 학습이라고 쓴 부분이 외생적 학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보기 ④에서 사회적 학습이 '내생적 학습'보다는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한 '외생적 학습'이지 않을까? 따라서 보기 ③을 선택해보는 것은 어떻게?

- ② ○ : Rose는 교훈을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들에 대한 행위지향적인 결론이라고 본다. 교훈이란 다른 지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원인-결과 모형의 형태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설계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창도자의 관할지역에서 채택할 수 있다. 교훈연구의 과정은 다른 지역에서 효과가 발생한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이 프로그램을 자기 지역으로 이전해서 채택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리 평가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이러한 유형의 학습은 공식적인 정책네트워크 내에서 시작되고, 정책결정자들이 그들의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테크닉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10.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루이스(Lewis)는 예산배분절정에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명제를 제시한다.
- ②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의회 의원들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에 분석초점을 둔다.
- ③ 윌로비와 서메이어(Willoughby & Thurmaier)의 다중합리성모형은 의원들의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의회의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다.
- ④ 단절균형예산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급격한 단절적 예산변화를 설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답] ①

[해설]

- ① ○ : V.B.Lewis는 V.O.Key의 지적에 따라 공공예산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기회비용에 입각한 상대적 가치, 상이한 목표 간 비교평가를 위한 증분분석, 공동 목표에 대한 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의 기본명제를 제시하며 대안적 예산제도를 제시하였다. 상대가치와 증분분석이 비용편익분석과 연관된다면, 상대적 효과성은 회계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상대가치와 증분분석이 상이한 목적의 사업간의 비교에 사용된다면, 상대적 효과성은 공동목표의 동종 사업의 비교에 사용된다.
- ② × :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의회 의원들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하고, 관료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 ③ × : 윌로비와 서메이어(Willoughby & Thurmaier)의 다중합리성모형은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의회 의원들이 아닌 중앙예산기구 등 정부 관료들의 예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다.
- ④ × : 단절균형예산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관련되며, 급격한 단절적 예산변화를 설명한다. 다만 나아가 우연히 발생하는 극적 사건에 의해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며, 그러한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고 본다.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대상은?

- ①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② 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③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④ 정책의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정답] ②

[해설]

- ② ○ : 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2.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장 낮은 안전의 욕구부터 시작하여 다섯 가지의 위계적 욕구단계가 존재한다.
- ② 안전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는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의 첫 번째 욕구단계인 존재욕구에 해당한다.
- ③ 어느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사회적 욕구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자신감, 성취감 등을 의미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 : 매슬로우는 욕구의 충족은 상대적인 것으로, 욕구의 완전한 충족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고 본다.
- ① × :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인 생존의 욕구에서 시작하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나아가는 다섯 가지의 위계적 욕구단계가 가정한다.
- ② × : 사회적 욕구는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의 두 번째 욕구단계인 관계욕구에 해당한다. 생존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의 첫 번째 욕구단계인 존재욕구에 해당한다.
- ④ × : 자아실현 욕구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자신감, 성취감 등을 의미한다.

13.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정도를 말한다.
- ②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요구는 집권화를 촉진한다.
- ③ 통솔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고층구조를 갖는다.
- ④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 : 복잡성은 조직의 문화정도를 의미한다. 단위 부서 간에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을 수평적 분화라고 한다. 수직적 분화는 계층적 분화로 권한과 책임에 따른 분화를 의미한다. 공간적 분화는 조직의 시설과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② × :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요구는 분권화를 촉진한다.
- ③ × : 통솔범위가 좁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고충구주에 갖는다.
- ④ × :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이 감소한다.

14. 다음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은?

A시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B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7곳을 단속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45명을 벌금 500만 ~ 3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해당 구역 8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상인대표단은 11일 "B상수원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일반음식점 규제·단속은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 ① 고객정치 ② 대중정치
③ 이익집단정치 ④ 기업가정치

[정답] ④

[해설]

- ④ ○ : 문제의 사례는 환경오염규제와 관련된다. 이는 J.Q.Wilson의 기업거정치에 해당한다.

		편의	
		집중	분산
비용	집중	이익집단 정치	기업가적 정치(운동가적 정치)
	분산	고객 정치	대중 정치

고객의 정치는 수입규제, 직업면허 등 대부분의 협의의 경제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대중적 정치(다수의 정치)의 예로는 독과점규제, 낙태규제, 음란물 규제 등이 해당한다. 기업가적 정치(운동가의 정치)의 예로는 원자력발전규제, 환경오염규제, 약자보호 규제 등 대부분의 재분배 정책이나 사회적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익집단 정치의 예로는 노사규제, 의약분업규제(한약규제) 등을 들 수 있다.

15.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한다.
- ② 사업별 보조율은 50%로 사업비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 ③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 :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으로 중앙의 조건과 통제가 따른다.
 ① × :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한다.
 ② × : 사업별 보조율은 50%로 정해지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으로 정해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 ④ x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16.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현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목표 변동 유형은?

- ① 목표 승계(succession)
- ② 목표 추가(multiplication)
- ③ 목표 확대(expansion)
- ④ 목표 대치(displacement)

[정답] ④

[해설]

- ④ ○ : 목표 대체(displacement of goals)란 조직목표를 왜곡하는 현상으로, 조직이 추구할 궁극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는데 이용될 수단을 서로 대체시키는 형태, 즉 목표와 수단 간의 왜곡 현상이다. 이는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에서 간부진이 노동자 권익 보호보다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더 신경)과 관련된다.
- ① × : 목표승계(goal succession)란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또는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조직해체가 어려워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서 이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소아마비 재단, 한국의 가족계획협회 등이 그 예이다.
- ② × : 목표추가는 목표의 다원화라고도 하며 기존의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 : 목표 확대란 기존에 추구하여 온 목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달성이 낙관적일 때 목표를 높이는 것)

17.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 ② 강임과 면직은 심사대상이나 휴직과 전보는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답] ④

[해설]

- ④ ○ :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방공무원법」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① ×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의 효력을 넘어서서 구속력이 인정된다.
- ② × :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하제, 면직, 전보** (기각)결고, (불문)경고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③ × :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18.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크게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가'로 구분된다.
- ② '성과계약 등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 ③ 다면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각 부처가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역량평가제도는 5급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 : 다면평가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하나의 개인이 평가하는 경우보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각 부처가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 × :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크게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가'로 구분된다.
- ② × :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연 1회 실시한다.
- ④ × : 역량평가제도는 5급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19.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은 소속 장관별로 개방형 직위 30 %, 공모 직위 20 %, 기관자율 직위 50 %로 이루어져 있다.
- ② 고위공무원단 직무 등급이 2009년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급중심의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③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직권면직이 가능하므로 제도 도입 전보다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되었다.
- ④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되는 풀(pool)에는 일반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무공무원도 포함된다.

[정답] ④

[해설]

- ④ ○ :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는 국장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 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부교육감 등이 포함된다.
- ① × :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은 소속 장관별로 개방형 직위 20 %, 공모 직위 30 %, 기관자율 직위 50 %로 이루어져 있다.
- ② × : 고위공무원단 직무 등급이 5등급으로 되어 있어 직무등급의 계급화 현상이 나타나서, 2009년 5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었다.
- ③ × :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 직권면직이 가능하는 등 제도 도입 전보다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약화되었다.

20.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개선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서울청사 등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② 민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민원24'를 도입하였다.
- ③ 정부에 대한 불편사항 제기, 국민제안, 부패 및 공익 신고 등을 위해 '국민신문고'를 도입하였다.
- ④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정보를 공개하고 조달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정답] ④

[해설]

- ④ × :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정보를 공개하고 조달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나라장터를 도입하였다. 온나라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정부 내부 업무처리와 문서 관리 등을 위해 도입한 전자 행정업무처리시스템이다.